

“100조 긴급자금 투입... 기업 도산 막을 것”

문 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중기 등에 29.1조원 경영 자금 추가 지원... 자금난에 숨통 고용 유지 지원금 대폭 확대 검토... 공과금 면제 등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기를 막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조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기를 막기 위해 1차 대책으로 내놓은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에서 추가로 50조원을 더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증액된 50조원은 기업 활동 위기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적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 원 금융지원에 추가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지원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 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1조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고정공급을 7.9조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 원 추가한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업이 스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도 20조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 어음도 개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10조 원 규모로 준비한 것을 10조 원을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 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10.7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운영된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의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정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유지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려운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

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주 열리는 3차 회의에선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뉴시스

“도민 삶의 질 향상 보탬
전북 체육 위상 높일 듯”

만경강변 체육공원
반값 체육관 대관료 등
전북체육회, 김성주
예비후보 공약 '환영'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김성주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전주병)가 발표한 체육 공약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김 예비후보는 만경강변 체육공원 조성, 반값 체육관 대관료, 수영장·체육관 확충, 전북체육박물관 건립 등 체육 관련 7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체육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전북 체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공약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이번 공약이 ▲전문체육·생활체육 동반성장 ▲체육 인프라 구축 ▲전북체육 위상 정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유인택 사무처장은 “체육을 통한 도민 행복증진과 자긍심 고취라는 비전 아래 활동하는 전북체육회로서 이번 체육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민주 전북도당, “무소속 복당 절대 불허”

‘당선 후 복당’ 김관영 예비후보 등에 “터무니없고 경솔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불복자와 민주당의 평가를 피해 무소속으로 총선에 뛰어든 인사들의 복당과 입당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한다.”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전북지역 무소속 예비후보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발언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당선 후 복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라며 긴급 성명까지 내고 민주당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국주영은 대변인(전북도의회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복당 발언을 한 무소속 김관영(군산) 예비후보를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도당 선대위는 성명에서 “무소속 김

관영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총선 승리 후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자기주관적 입장을 밝혔다. 이해한 민주당 대표 역시 과거 탈당 후 복당을 한 전례를 빗대면서 자신 역시 민주당에 복당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고 경솔한 입장이다”고 비판하고 “김 후보는 경계망종의 자제를 바로잡길 바라고 더 이상 군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도당 선대위는 그러면서 “김관영 후보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안철수를 따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 당으로 동지를 옮긴 장본인이다. 이후 안철수의 대선 패배 후 국민의 당에서 또다시 자유한국당 2중대적인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바꾸고 국회의원으로선 몸값만 올리기 위해 급한 정지인으로 전락한 인물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주 “n번방 가담자 전원 신상 공개... 불법 음란물 대청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청소년 성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통된 세칭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에게 대한 엄벌과 함께 성범죄 근절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민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의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공직자 회인 명령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며,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n번방 운영자 중 ‘박사방’ 운영자를 겨냥하며 “평범한 대학생이 성착취 범죄를 기획, 실행할 만큼 범죄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청원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촬영에 대해, 그 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데, 형량이 너무 낮아서 이 부분은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김윤덕 “평화1동 조성 치매안심마을을 더욱 확대”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의 예비후보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치매문제 해결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김윤덕 후보는 “전주 평화1동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치매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치매는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초기치매단계가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치매관리 서비스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다음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치매환자를 지역사회와 함께 돌보는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함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치매 안심마을을 통해 인지강화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인식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등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할 문제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치매를 이해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지반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별취재반

정동영 “전주시청사 덕진구로 이전할 것”



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전주병)가 완산구에 있는 전주시청사를 덕진구로 이전하고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조선 건축 양식’으로 신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예비후보는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조선 문화의 분향인 전주 이미지를 결합한 조선 건축양식을 담은 시청사를 덕진구 일원에 신축하겠다”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은 미래 200년을 기는 청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지 매입 등 2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필요예산을 세금 환편 들이지 않고 신속 이전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신청사 이전 부지에 민간 매칭으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해 임대 수익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청사 신축면적은 5만㎡로 필요한 예산은 1500억여 원으로 추정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 방식은 몇 년전 일본 도쿄 도요시마구에서 시청사를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성공한 모델”이라고 소개하며 “이 임대아파트의 30%는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산된 행정 서비스 제공 공간을 집적화해 행정단위간 협업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혼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고상진, 총선 연기 요청 주요 공약 등 발표



민생당 고상진 예비후보(익산갑)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 연기 요청, 6대 공약 등을 발표했다”고 24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청 프레스룸에서 밝혔다.

그 예비후보는 “예정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것 못지않게 큰 문제는 감염병이 선거가 치러지면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는 지금까지의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넘어서는 망나니국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총선은 반드시 연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익산시민들께서 후보의 자질과 공약, 정책을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 예비후보는 ▲제2 혁신도시(면지, 악취, 폐식산 등 환경문제 해결) 건강간 익산(농업관련공공기관과 더불어 환경기관 유지)조성 ▲마한백제왕도복원 사업-1조원 프로젝트를 추진을 통한 경우와 버거운 관공도시진 ▲물류거점도시, 익산조성 ▲경마공원(경마장) 유치 ▲KT&G 본사 익산 이전추진 ▲수화도시, 익산조성 (세계적인 수화박물관건립을 통한 교육관광 도시익산 조성) 등 공약을 발표했다. /특별취재반

조배숙 ‘치매안심사회 위한 3대 공약 제시’



민생당 조배숙 예비후보(익산갑)가 ‘치매안심사회를 위한 3대 공약’을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24일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노년층의 불안은 장년의 불안으로, 장년의 불안은 청년의 불안으로 이어져 불안사회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면서 “특히 치매는 65세 이상 인구 중 10%의 유병률을 보이는 병증으로, 국가와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보살피는 것은 불안사회를 해소하는 절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그가 공약한 3대 공약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역건강보험료 국가 대납 △노부부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사랑간병카드’ 발급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협동 치매돌봄법’ 도입이다.

이중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관리를 위해 필요한 노인 건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입원 치료 후 재가 치료 시 센터가 각급 병원의 치료 정보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치매 환자의 건강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두고 치매안심센터가 이를 활용, 치매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협동 치매돌봄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반

이강래 “문재인 정부 성공 위해 원팀 돼 나아갈 것”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24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총선 승리를 향한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선거사무실에서 ‘100년 준비 원팀 출정식’을 갖고 “이번 선거는 초선에서 초선으로 이어지는 지난 8년간 지역현안들이 정제되어 있는 등 지역발전의 기로에서 치러지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이강래 예비후보가 남원읍삼천리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직을 맡은 이후 처음 갖는 행사로 그 동안 경선과정의 양금을 탐욕히 씌어내고 한 자리에 모여 향후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재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안호영, 선거대책위 발족 총선 승리 향해 ‘시동’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가 24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총선 승리를 향한 시동을 걸었다.

안호영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 발족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 참석 및 입장장 수여 등으로 진행했다.

선거대책위는 크게 상임 및 공동선대위원장, 선거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그리고 직능별 본부부 구성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최홍일 전 완주군수, 임수진 전 진안군수, 황정수 전 무주군수, 권창환 전 도의원(완주), 오재만 전 장수군의회 의장이 임명됐다.

또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상준 전 농협전북본부장, 김정호 변호사, 김영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안현수 노인회 진안군지회장, 김준환 전 무주군의회 회장, 전선자 김원태문화기념사업회 회장, 백남훈 전 무주군의원, 김종문 장수군의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4개군의 현직진 군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임명됐다. /특별취재반